



주간통일정세 2009-14(2009.03.30~04.0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14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로켓 발사 전 과정 관찰(4/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 위원장은 위성관계종합지휘소를 찾아 '광명성 2호'의 발사 전 과정을 관찰하고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은 운반 로켓도 인공위성도 100%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해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주체적인 과학 기술의 자랑찬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이어서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을 만나 기념 사진을 찍었으며, 전병호 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와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소개

##### ● 김정일, 평양대극장 현지지도(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대극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새벽 보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관한 보도는 지난달 28일 평안북도 구성공작기계공장과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보도후 8일 만임.
- 김 위원장은 이날 장시간에 걸쳐 극장의 내·외부를 둘러보고 만족해하며 리모델링에 참여한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통신은 보도, 북한은 4월 3일 평양대극장 리모델링 준공식을 가졌음.
- 김 위원장의 평양대극장 현지지도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최익규 당 선전선동부장, 강능수 문화상,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 나. 정치 관련

##### ● 조선신보, 北, 세계 9번째 자력 발사국(4/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98년 이래 두번째로 되는 인공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쏘아올림으로써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과시했다"고 평가
- 조선신보는 '우주개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는 조선(북한)이 이룩한 첨단과학기술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신문은 북한이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보고 있다며 “우주 개발 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나 같다”고 강조, 신문은 “지금까지 자체로 만든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러시아, 미국 등의 순으로 위성 자력발사국의 순위를 꼽으면서, 국제사회의 평가와 달리 북한은 1998년 8월 첫번째 위성인 광명성 1호 발사로 이란(2009.2)에 앞서 9번째 발사국이라고 강조
- 신문은 98년 발사에 대해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며 인공위성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도, 남조선도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했다”며 “연대별로 된 미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발사정보’에도 조선이 98년 8월 29일 ‘광명성1호’를 쏘아올렸다고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고 덧붙임.

#### ● 北, 인공위성 궤도 진입 성공 발표(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오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후 3시28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 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 조선중앙통신은 3단계로 된 은하 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2초만인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 통신은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거리 1천426km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라고 언급
- 또,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고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며,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리용하여 UHF 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통신은 ‘광명성 2호’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켓과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결실”이라고 주장

#### ● 평양은 조용(4/4,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방북했다가 4일 평양에서 귀국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평양 시내에서 ‘인공위성 발



사와 관련해 특별히 눈에 띄는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 또 북측 관계자들은 통일부의 권고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이날 귀환하려는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들에게 “들어와서 봤으니 알겠지만 우리가 초청장을 보낸 것은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이라며 “통일부에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가 전언

- 지난달 28일 방북했다가 4일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해 베이징을 거쳐 돌아온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 관계자는 “거리 분위기에서 별다른 이상 동향이 없었다”며 “인공위성 발사를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구호판 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소개, 또 시내 경비가 강화되거나 군복 차림의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 다만 “만났던 북측 관계자들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사안인데, 특히 일본이 왜 걸고넘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언
- 이날 평양에서 귀환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도 “평상시와 별다른 바 없이 조용했다”며 “북측 관계자들은 위성 발사 사실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고 소개

● **北, 로켓발사 앞두고 초긴장 태세 조성(4/3, 노동신문; 4/2, 조선중앙방송; 4/2, 조선중앙TV; 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들은 3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2일 이례적인 ‘중대보도’를 통해 “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반복보도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한 분위기를 조성
-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중대보도’를 전문 게재했으며, 조선중앙방송은 2일 오후 2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5차례 재방송했고, 조선중앙TV도 2일 반복 보도
- 1일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이 RC-135 전략정찰기로 로켓 발사장 인근 해안 상공에서 공중정찰하고 있다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준비를 간섭하며 함부로 우리측 영공에 간섭 비행기를 침범시킨다면...가차없이 쏘아 갈 것”이라고 경고

● **조선신보, 北로켓기술 수출 언급(4/4, 조선신보)**

-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조선신보가 ‘2012년 구상 안받침한 광명성 2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일 보도
- 신문은 “현 시기 조선의 최대 과제는 경제부흥”이라며 “대형 로켓의 개발은 우주공간에 운반된 각종 위성의 이용, 로켓 개발 과정에 탄생한 첨단기술의 민수 이전,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



출 등 일련의 경제적 효과를 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

- 조선신보는 “(북한)인민들에게 있어 ‘광명성 2호’의 당면한 의미는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국산 로켓에 의한 시험통신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2012년을 향한 조선식 경제부흥 노선-‘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사변”이라며 4일 오전 현재 발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로켓발사의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위성발사의 신호는 명백하다”며 “2012년은 어길 수 없는 시한이고 최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고영도자의 의지”라고 강조

#### ● 北, 곧 인공위성 발사(4/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곧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된다”고 발표,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통보’를 인용,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고 소개

#### ● 리태남 평남도 黨책임비서 경질된 듯(4/3, 연합)

- 북한이 3월 말 사망한 홍성남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각 도당 책임비서가 모두 포함됐으나 유일하게 리태남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만 빠져 그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추정됨.
-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조명록 국방위위원회 1부위원장, 김영일 총리 등 당·정·군 고위 간부 36명으로 구성, 이 위원회에는 리태남을 제외하고 홍석형(함북), 김평해(평북), 김락희(황남), 최룡해(황북), 박도춘(자강도), 리철봉(강원도), 김히택(량강도) 등 각 도당 책임비서가 모두 포함되었음. 그러나 북한 언론매체들은 그의 후임으로 불만한 다른 인물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음.
- 리태남이라는 이름은 대신 3월 22일 열린 북한 최대규모의 승리자 동차연합기업소(평남 덕천소재)의 종업원 궤기모임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이 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등장해 그가 평남도 당 책임비서에서 물러난 후 이 자리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 홍성남 함남도당책임비서 장례식 거행(4/2, 조선중앙통신)

- 홍성남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의 장례식이 2일 평양 애국열사릉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장례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과 유가족이 참석



- **北, 로켓발사 앞두고 최종입장 표명(4/2,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2일 '중대보도'를 발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조치에 대해 “사소한 ‘요격’ 움직임”에도 지체없이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 북한의 이날 ‘중대보도’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따른 3각 공조체제를 갖춘 한국과 미국 일본을 두루 겨냥한 가운데 특히 요격과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일본을 주 과녁으로 삼았음.
  - 북한 군총참모부는 북한의 로켓이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라는 ‘파괴명령’을 내리거나 안보리 회부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요격 시 “이미 전개된 (일본의) 요격수단 뿐 아니라 중요 대상”도 보복타격할 것이라고 ‘확전 불사’ 의지도 드러냄.
  - 그러나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에 대해선 일본의 요격에 대응한 자신들의 보복타격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개된 무력을 지체없이 철수”시킬 것을 요구, 미국에 대한 이러한 ‘연성’ 언급은 미국측이 최근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으로 보인다며 요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
  - 총참모부는 “우주공간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인류의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사업”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 **노동신문, 선군조선 전성기 만들자(4/1,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일 “뜻깊은 4월”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위에 뭉쳐 “김일성조선, 선군조선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자”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뜻 깊은 4월에 모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장군님(김정일)의 애국의 의지와 강행군 정신을 체질화하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로 삶을 빛내일 비상한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 신문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 위원장의 현지도를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의 무더위도 가리지 않고 무한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애국헌신의 강행군”이라고 표현하며 “전후 천리마대고조 시기처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민들을 독려
  - 그러나 신문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는 자력갱생에 있다며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식, 우리의 힘이 제일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



● **北, 이번엔 안보리 압박(4/1,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1일 ‘돌부처도 경악할 어불성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문제를 취급하면 “특정국가들의 손탁(손아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놓는 것으로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美정찰기 영공침범시 격추(4/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미국이 RC-135 전락정찰기를 이용,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 대한 공중정찰을 하고 있다며 “미제가 감히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준비를 간섭하며 함부로 우리측 영공에 간첩 비행기를 침범시킨다면” 북한군이 “가차없이 쏘아갈 것”이라고 경고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의 온라인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은 최근호(제272호)에서 “북한 당국은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전국 시, 군당 간부들에게 ‘긴장된 정세’ 사항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며 강연은 “무수단에서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적대국들이 방해할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소개, 소식지는 또 “(북한의) 노농적위대는 물론이고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까지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고 언급

● **김정일, 생일연설서 ‘강성대국’ 드라이브(3/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장군님따라 조선은 나아간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생일 연설을 통해 “수령님(김일성)께서는 늘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우리는 아직 수령님의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는 최단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할 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언
- 신문은 또 그가 “이 땅 위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것은 수령님의 뜻이었고 당의 의지”라며 “우리는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2012년에 반드시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신문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석달동안 “강행군 또 강행군”했다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원산청년발전소 등 주요 경제시설에 대한 그의 현지도 동선을 자세히 되풀이 설명하고 “올해의 하루를 늦추면 내일의 10년, 100년을 잃게 된다”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라” “찾으시는 곳마다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시며 새로운(목표 달성) 시간표를 정해주는 장군님의 강행군 속도를 따라” 등의 표현을 쓰며 “대고조에 힘껏 박차를 가하라”고 독려



- **北외무성, 유엔 대북인권 결의 배경(3/30, 북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6일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30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결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북한) 결의”라거나 결의안을 공동제안한 “EU(유럽연합)와 일본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마다 벌리고 있는 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

#### 다. 경제 관련

- **北주민, 수백만명, 기아로 고통(4/5, 연합)**
  -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로 굶주리고 있다고 유엔 관리가 5일 밝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베이징(北京)지부의 레나 사벨리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 위기를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상황들로 인해 인도주의적 필요가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당부, WFP는 잇따른 흉작으로 북한 인구의 40%가 넘는 870만 명이 몇 달 내 식량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
  - 지난 9월 WFP는 세계 각국에 북한을 위해 5억4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원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목표량의 11%밖에 확보하지 못했음. 이는 18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으로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
- **美 구호단체, 지난달 말 북한 철수(4/3, 연합)**
  - 북한에서 식량 배급활동을 펴 온 미국 구호단체들이 북한의 추방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모두 철수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3일 밝힘. 이 소식통은 마지막까지 북한에 남아있던 구호요원들이 3월 30~31일 모두 출국했다고 전언
  - 미국이 대북지원을 2년 6개월 만에 재개함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북한에서 활동해 온 이들 단체는 2009년 5월까지 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50만t의 식량을 배급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지난 17일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더 이상 식량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구호단체들에 3월 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 외교 소식통은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들어온 식량을 모두 배급하지도 못한 채 북한을 떠났다고 설명
- **北, 초등학교 신입생에 교복 공급(4/2, 조선신보)**
  - 북한은 1일 신(新)학년도를 맞아 모든 소학교(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국정가격으로 공급했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신문은 “11년제 무료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에서는 새 학년도를 맞으며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학습장, 필갑, 연필, 지우개, 신발 등의 학용품 일식을 낮은(싼)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전통화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새 교복은 개학 6개월 전에 어린이들의 몸치수를 쟀 데 기초해 전문 피복업체들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며 교복과 학용품 공급은 각 지역의 공업품상점을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

● 北, 네덜란드서 역병에 강한 감자품종 도입(4/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네덜란드로부터 감자 역병에 저항이 강한 감자 품종 15t을 이달초 도입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방송은 북한 과학자 2명이 2008년 7월 네덜란드에 입국, 바게닝겐 대학 산하 국제식물연구소 연구팀과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 감자 역병에 저항이 강하고 북한 땅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했다며 이미 선적을 마친 새 품종의 감자가 성공적으로 재배되면 북한의 감자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소개
- 방송은 국제식물연구소의 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 북한의 감자 생산량이 역병 때문에 50%가량 떨어졌다고 설명

라. 군사 관련

● 당국자, 로켓 2·3단계 함께 떨어져(4/5, 연합)

-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관련, “로켓의 2단계와 3단계 부분이 한꺼번에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미국측이 평가했다”고 언급
- 이 당국자는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전하고 “그러므로 궤도에 올라간 것은 없다”며 실패를 확인, 그는 2·3단계 로켓의 낙하지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짧았다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위치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2단계와 3단계 로켓의 분리여부와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는지 여부, 실패원인 등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 그는 발사는 실패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평가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
- 이 당국자는 “우리가 계속 문제시한 것은 북한의 로켓이 위성인지 미사일인지나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아니라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라며 발사 실패로 정부 대응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 그는 “발사가 실패했지만 정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이란, 北 로켓 발사에 협력(4/3,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이달 4~8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인공위성’에 이란이 협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북한과 이란 양국이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서로 제공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임.
-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미사일 전문가인 찰스 빅선임연구원은 위성 촬영 사진에서 나타난 관제 시설 부근의 버스나 손님용 차량은 테헤란에서 온 사람들이 탄 차량이라고 설명, 그는 이란에는 북한을 위한 전용 엔진 시험장이 있으며 이번에 발사하려는 대포동 2호 개량형의 엔진도 이란에서 연소 실험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축구협회, 남북전 南당국 반복책동 산물 주장(4/5, 북한축구협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 북한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전에서 북한 선수들의 배탈과 정대세 헤딩슛의 ‘노 골’ 처리 등을 남한 정부의 “반공화국(반북) 대결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남한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사죄할 것”을 요구,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남조선 당국과 불순세력들”의 “차후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여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
- 북한 축구협회는 5일 대변인 성명에서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 전 과정을 검토하고 적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 성명은 경기 하루 전 선수단 주축인 “2명의 문지기와 공격수 정대세 선수가 구토·설사를 하면서 심한 머리아픔으로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의심할 바 없이 그 어떤 불량식품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 성명은 “우리가 넣은 골은 틀림없는 득점이고 우리가 실점 당하게 된 반칙도 우리 선수가 아니라 남조선 선수의 반칙이었다는 것은 녹화물에 의해서도 확인됐다”며 “편심한 것은 분명히 남조선 불순세력들의 막후책동과 매수된 자들의 의식적이고 비열한 행위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고 주장

● 김일성 생일, ‘국제예술축전’ 개최(4/5, 노동신문)

- 북한은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국면과 상관없이 고 김일성 주석 생일(4.15)인 ‘태양절’을 맞아 해외 예술단도 초청해 열어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준비 상황을 전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띄웠음.



- 노동신문은 5일 ‘주체의 태양송가 높이 올려 퍼질 축전도시 평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일 평양대극장에서 성대히 개막될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축전 준비 작업이 “마감단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이번 축전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예술단체들과 국제콩쿠르 수상자들과 명배우들이 전례없이 많이 참가”한다며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몽골, 베트남, 우크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일본 등 20여개 나라에서 수십 개 예술단과 대표단들의 예술인과 손님 수백 명이 참가한다고 설명. 특히 미국에서 ‘애니모스 밴드’와 ‘캐스팅 크라운즈’, 프랑스 실내악단, 이탈리아 여성3중창단 등이 참가한다고 신문은 전언

#### ● 천도교 창도 기념식 개최(4/5, 조선중앙통신)

- 천도교 창도 149주년 천일기념식이 5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기념식에는 류미영 조선천도교회 위원장, 오익제 고문 등이 참석

#### ● 평양대극장, 리모델링 완공(4/3, 조선중앙통신)

- 지난 1960년 개관된 평양대극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3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양 대극장은 2008년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왔음.
- 통신은 “면모를 일신한 대극장에는 1천300여 석의 관람석과 무대, 최신음향 및 조명설비, 여러 연습실과 분장실은 물론 편의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소개
- 준공식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준공사를 통해 “피바다가극단과 평양대극장의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은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내놓는 것과 함께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북한은 이번에 준공한 평양대극장의 첫 무대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준공식에는 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과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가

#### ● 北TV, 정대세 헤딩슛에 아쉬움(4/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4월 1일 열린 남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5차전을 이틀 후인 3일 오후 약 1시간 정도 녹화중계
- 이날 해설로 나선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후반 1분 남한의 골키퍼 이운재가 가까스로 걷어낸 정대세의 헤딩슛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서 “아...득점이 된 볼이었다



고 보여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 하지만 리 교수는 곧바로 “경기장을 표시하는 선은 경기장 안과 같이 취급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이 금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경기장 안이라고 보고 완전히 선을 통과해야만 아웃, 득점으로 결정된다”고 소개하면서 골로 인정하지 않은 심판의 결정을 수용

- 리 교수는 북한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 가능성에 대해 “이 경기에서 우리팀이 아쉽게도 져서 우리팀의 종합점수는 10점에 머물게 됐다”며 “남조선팀은 11점이지만 우리팀은 앞으로 두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

● 北 각급 학교 새 학년도 개학(4/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 학교가 1일 일제히 개학
- 조선중앙통신은 “주체98(2009)년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며 “전국의 학교들에서는 개학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하고 개학식장에선 교직원과 상급생, 학부모들이 신입생들을 축하해 줬다고 소개

● 北 IT수재학교·금성학원, 교사·기숙사 신축(3/31,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의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기관이자 최근엔 컴퓨터 수재반도 설치된 금성학원이 컴퓨터 수재반 용도의 새 교사(校舎)와 기숙사를 신축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1일 보도
- 평양 만경대구역 금성동에 있는 금성학원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부속학교로, 의무교육 과정인 4년제 인민반 및 6년제 중등반 과정과 함께 4년제의 전문부를 두었음.

##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유엔 안보리 ‘北로켓’ 1차 협의 종료(4/6,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회의 1차 비공개 협의가 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종결, 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의 협의에서 안보리는 대북 규탄 회전문 작성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결론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는 6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

● 유엔 안보리 6일 새벽 소집(4/5, 연합)

- 일본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 6일 새벽(한국시간)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 유엔 한국대표부 김봉현 차석대사는 5일 “일본 측이 4일 밤 11시5분(현지시간) 의장국인 멕시코 대표부에 팩스와 이메일, 전화를 통



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됐다”고 언급

-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기존 제재안 보다 더 강도가 높은 새 결의안 채택 또는 유명무실화된 기존 제재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서 의장 성명 채택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사국 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북 결의를 채택할지, 의장 성명 수준의 경고로 끝낼지를 결정한 뒤 공개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확정짓게 됨.

#### ● 美-EU, 北 규탄 공동성명 채택(4/5, 연합)

-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 5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
- 미-EU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규범(norm)을 준수하며,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라”고 촉구
- 성명은 “(북한이) 주장한 이번 발사의 목적에 상관없이 북한은 탄도 미사일 역량개발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 주변국 및 원거리 국가들을 위협할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는 의도”라고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가 아무런 처벌 없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가 보여주는 것을 포함,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여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촉구
- 대서양 양안 정상들은 그러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음. 성명은 “미국과 EU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WMD 추구 및 주변국 위협 정책을 포기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힘.

#### 나. 북·미 관계

##### ● 美, 北로켓발사 확인…유엔결의 위반(4/5,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



- 집을 요청했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으로 규정하고 로켓 발사 행위가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행위라는 점을 지적
- 체코 프라하 방문 중 로켓 발사 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을 자초했다”고 언급
  -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음.
  -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관련, 그는 “비핵화 달성과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과 주변 4개국 및 미국 간의 다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제공해왔다”고 말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이후에도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북·미관계 현안을 처리나갈 것임을 시사

#### ● 오바마, 北·이란 핵확산에 우려 표명(4/4, 연합)

- 유럽을 방문 중인 벅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스트라스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젊은이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핵확산 문제에 언급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특정해 지목
- 그는 이어 런던 G20 정상회의 기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핵무기 감축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연후에야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

#### ● 보즈워스, 北로켓발사 재고 기대(4/4,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재고하길 촉구,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로켓 발사가 미사일 이든 인공위성이든 다를 바가 없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언급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유엔안보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그는 그러나 자신의 대북 협상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압박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며, 인센티브(유인책)를 결합해야 한다”고 밝혀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이 강경일변도로 치닫지 않을 것임을 시사, 그는 미국이 로켓 발사 이후 ‘장기적인 과제’인 6자회담으로 북



귀하는 문제를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로켓 발사에 따른 소란이 진정되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그는 로켓 발사와 6자회담 재개 사이에 냉각기가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는 점칠 수 없지만,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단기적인 문제(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과제인 6자회담 테이블에 가급적 조속히 복귀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답변하고 특히 6자회담이 북한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양자접촉을 계속하겠으며, 어느 때라도 (양자 대화) 채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언급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자신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초청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답변, 또 방북시 의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가 다뤄질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북한을 역내에 어떻게 수용, 통합시키느냐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

#### ● 北, 미국이 결정하면 미군유해 발굴 재개(4/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가 북한은 한국전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재개 여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언급
- 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협회’ 프랭크 미터스키 워싱턴지부장은 2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발굴에 관한 청문회에서 김명길 공사를 지난 1일 만났을 때 김 공사가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한 쪽은 미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언급, 그는 “김 공사는 한국전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의 재개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언급

#### ● 美, 기자회견 외교노력 지속…안전 최우선(4/1, 연합뉴스)

-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데 대해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관심은 항상 미국민의 안전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
- 그는 ‘북한이 여기자 2명을 공정하게 기소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기소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봤지만, 우리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접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



한 외교적 해결을 계속 추구하고, 우리 국민을 도울 수 있는지 보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美, 스웨덴 외교관 통해 北 억류기자 면담(3/30,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 국적 여기자 2명을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면담했다고 30일 밝힘. 고든 두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에 면담이 이뤄졌다”면서 “스웨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소개

#### 다. 북·중 관계

- **中, 모든 관련국에 냉정과 자제 촉구(4/5,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중단 촉구에도 5일 로켓 발사를 실시,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모든 당사국들의 냉정함과 자제를 촉구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실험통신위성이라며 로켓을 발사한 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모든 관련국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줄 것을 희망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유지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이어 “중국은 앞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고 주장
  - 북한의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은 지난 수 주 간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외교적인 수단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 라. 북·러 관계

- **北, 러시아에 로켓발사 사전 통보(4/5,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러시아에 미리 통보했다고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5일 발표,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러시아 우주 통제소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위로 날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모든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
  - 그는 북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전하고 각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평가, 가능한 행동을 고려할 때 자제를 보일 것을 촉구
  - 또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소집에 반대, 코사체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는 군사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만이 북한 로켓 발사가 군사용인지, 평화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



● **러 당국, 인공위성 탑재 발사 확인(4/5, 인테르팍스 통신; 리아노보시티 통신)**

- 러시아 방공망이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확인했으며, 탑재물은 인공위성임이 분명하다고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세르게이 로슈차 극동지역 미사일부대 부사령관은 “로켓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6시32분(한국시간 오전 11시32분) 발사됐다”면서 러시아 방공 레이다가 로켓이 사정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추적했다고 소개
- 역시 관영인 리아 노보시티 통신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고 로켓의 궤적으로 미뤄 위성으로 확인됐다고 일본과 서방 언론을 인용해 보도, 통신은 로켓 낙하물이 일본을 비껴가면서 일본은 그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소개

● **러시아, 북한에 로켓발사 자제 재촉구(4/2,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 대변인은 “로켓 발사 자제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북핵 6자회담에서 신뢰를 쌓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러면서 그는 “관련국도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로켓 발사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
- 앞서 3월 27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 차관도 북한에는 로켓 발사 자제를, 주변국에는 침착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월 1일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를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음.

마. 북·일 관계

● **日, 대북 추가 제재 착수(4/5, 연합)**

- 발사 자제 촉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각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인공위성이라도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촉구한 유엔안보리 1718호에 위반된다는 입장에 따라 강력한 유감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며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언급
- 일본 정부는 우선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며 오는 10일 열리는 각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정식 결정

-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선박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를 그동안은 6개월 기한으로 연장해왔음.
- 또 일본 정부는 “위성이라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이같은 독자제재와는 별도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목표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일 계획

#### ● 美日, 北발사시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4/3, 요미우리 신문)

-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1718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유엔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새 결의안의 부속 문서로서 금융제재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기업 등 10개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미국과 일본이 작성 중인 새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2006년에 채택한 1718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핵심, 1718 결의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기업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금융제재도 포함돼 있지만 기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리스트는 없었음. 미국은 새로운 제재 대상 리스트를 정함으로써 각국에 철저히 제재를 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새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어서 의장성명이나 대언론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도 미국과 일본은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 김정남, 日정부 대응 자위 위해 당연(3/30, 후지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정남(正男)씨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의 행동은 자위(自衛)를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후지TV가 31일 보도, 후지TV는 30일 중국 베이징국제공항과 마카오에서 김정남 씨를 인터뷰
- 이 방송은 또 “북한이 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는가”란 질문에 “김정남씨가 ‘모르겠다. 6자회담과,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김 위원장이 많이 야윈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알다시피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진다. 뚱뚱한 것보다는 마른 편이 좋지 않냐. 아마 아버지가 피곤했었던 것 같다. 격무 때문에”라고 말했다고 보도



## 바. 기타외교 관계

### ● 유럽당국, 김정일 요트 구입대금 압수(4/5, 일본 지지통신)

- 유럽 금융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대금의 일부인 수백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압수된 돈은 북한 당국자가 최근 이탈리아 회사와 맺은 2척의 요트 구입 계약금으로,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요트가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차압된 것으로 알려짐. 유럽 금융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주재 북한 당국자가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탈리아 이지무트사의 호화요트 95형과 105형 2척으로, 전체 대금은 2천만 달러(약 280억 원)에 달하며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해 온 이탈리아 당국이 이 계약을 파악, 유럽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짐.

### ● 나토, 북한 핵 활동에 깊이 우려(4/5, 연합)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우려를 나타냄.
- 나토 '맹주'인 미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정상회의 때마다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로켓 발사를 앞둔 시점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8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4일 채택한 '스트라스부르-켈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핵 비확산조약(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시, 나토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확산 활동을 깊이 우려하며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라고 지적

## 3. 대남정세

### ● 정부, 北로켓발사, 안보리결의위반 도발행위(4/5, 연합)

-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공식 발표, "북한이 2009년 4월5일 11시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소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고 언급



- 또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언급

#### ● 정부, 北 체류인원 최소화(4/4, 연합)

-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 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평양 등 북한 지역 내 우리 측 체류 인원을 최소화. 통일부는 북한이 예고한 로켓발사 기간(4~8일) 첫날인 이날 평양에 교류협력 등 사업을 위해 체류하던 우리 국민 81명이 항공편을 이용, 중국 베이징(北京), 선양(瀋陽)으로 각각 나왔다며 당분간 평양에는 장기간 상주해온 평화자동차 관계자 1명만 남게 됐다고 밝힘.
- 또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161명이 방북하고 528명이 귀환함으로써 3일 밤까지 906명이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4일 오후 7시 현재 540명으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지역에는 금강산 지역 체류인원 41명을 포함, 우리 국민 582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발표

#### ● 정부, 민간에 방북 최소화 권고(4/3, 통일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기간을 전후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해당기간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권고도 하고 있다”고 언급

#### ● 北, 조사 끝날 때까지 접견 불가 통보(4/3, 연합)

- 북한은 3일 역류상태에서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조진식 사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측은 조 사장에게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 유씨의 식사·잠자리·건강·신변안전 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합의에 접견 허용 관련 규정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종료시까지 접견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고 “북측은 또 현재 유씨가 개성 지역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
-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세부 내용은 적시되지 않음.



● 정부, 北 말라리아 방역에 15억원 지원(4/3,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의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통일부는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 현인택 장관은 “이 사업은 북한 주민은 물론 (북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시의성을 감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언급, 안보위협 요인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4~8일 사이로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인도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 北 상하이무역대표부 대표 부인 탈북(4/2, 연합뉴스)

-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북한 무역대표 심 모씨의 부인 리 모씨가 최근 자식들과 함께 탈북, 남한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2일 “리씨는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3월 초 입국했으며 현재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신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
- 리씨는 남편이 회의 참석 차 지난 1월 평양에 들어간 시기에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짐. 상하이 북한 무역대표부는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 논의된 뒤 설치된 것으로, 영사 업무와 무역 활동 등을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엄밀히 말해 상하이 북한 무역 대표부는 정식 공관이라기보다는 법인 형태의 기관으로, 현지 북한 주재원과 식당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외부에는 연락사무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

● 北, 개성공단 남측 직원 체포해 조사(3/30,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난했다는 등의 혐의로 30일 오전 체포해 조사 중임.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 직원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脫北)을 책동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북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40대 중반의 미혼 남성인 유씨는 현대아산의 기능직 계약직원으로 3년째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가 오전 11시50분쯤 개성공단의 우리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발표, 유씨는 개성공단 내 북한 보위부에서 남측 인원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첨부1〉 우리정부의 北로켓발사 공식입장 [전문]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

1.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
2.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이다.
3.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4.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5.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유 명 환 외교통상부 장관



### 〈첨부2〉 北 “진입 성공” 발표 [전문]

북한은 5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운반 로켓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5일 오후 3시28분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 2호’는 40.6°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거리 1,426km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이다.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운반로켓트 ‘은하-2호’는 3계단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켓트와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에 아버지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룩된 우리 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이번 위성발사의 성공은 총진군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주체98(2009)년 4월 5일 평양』



### 〈첨부3〉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전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오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도발적 행위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했고, 자제에 대한 명확한 요청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켰다.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기 위해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즉각 협의를 할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적인 도발 행동을 하지 말것을 강조한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높은 우선 순위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와 안정 유지를 전적으로 다짐하며,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긴장을 줄이며 북한과 주변 4개국 및 미국 간의 다른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한 편입되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 ◀첨부 4>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일지

- ▲1975 = 중국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해 미사일 연구 시작
- ▲1981 = 이집트서 24기의 스킨드 B형(R-17E) 미사일 및 발사대 도입해 모방생산 착수
- ▲1984 = 스킨드 B형 복사형인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킨드 A형 개발 및 발사시험
- ▲1985 = 사거리 320~340km의 개량형 스킨드 B형 미사일 개발
- ▲1989 = 사거리 500km의 스킨드 C형 미사일 개발
- ▲1993.5 =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사거리 1천300km 추정)
- ▲1998.8 = ‘대포동 1호’ 발사(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주장. 사거리 1천800~2천500km,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미사일)
- ▲1999.9 =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한다는 북·미 합의 결과)
- ▲2001.5 =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럽연합(EU)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시험 발사 유예하겠다”고 천명
- ▲2002.9 = 북·일간 평양선언에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 삽입
- ▲2003.2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2003.3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2003.4 = 서해상에서 육지로 사거리 60km의 실크웬 미사일 시험 발사
- ▲2003.10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중국제 실크웬 추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 ▲2004.5 = 북·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2002.9) 내용 재확인
- ▲2005.2 = 美 중앙정보국(CIA) 포터 고스 국장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2005.3 = 北외무성 비망록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 (북)·미 사이의 대화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도 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
- ▲2005.5 = 北, 동해상에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 ▲2005.6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에게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정 장관이 전함
- ▲2006.3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 발사(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의 개량형인 KN-02과 유사형)
- ▲2006.5 = 日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보도
- ▲2006.6.12 = 美관리 “北 ICBM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 언급
- ▲2006.7.5 =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 노동 및 스커드급 등 총 7발 발사
- ▲2007.5.25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2007.6.7 = 서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2007.6.19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2007.6.27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KN-02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2008.3.28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 ▲2008.5.31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2008.10.8 =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2009.4.5 = 北, 오전 11시30분 15초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연합



#### 〈첨부5〉 北 로켓관련 입장 발표 일지

- ▲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 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 ▲3. 9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
- ▲3.12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다”고 발표. 실제로 4월 4~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IMO에 로켓 궤도 좌표와 함께 통보.
- ▲3.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6자회담 불참을 경고.
- ▲3.26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갖는 형식으로 안보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대한 난폭한 적대 행위”라며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는 물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
- ▲3.3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면 이는 대북 “선전포고”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4. 2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를 통해 “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北로켓발사

##### ● 美 “北 로켓탑재물 궤도진입 실패”(4/5)

- 미국은 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주장과는 달리, 장거리로켓 탑재물이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의 발사체가 본토나 하와이 등에 위협이 되지 않아 요격에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미군 북부사령부(USNORTHCOM)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미방공 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미 북부사령부 관리들이 북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낙하했으나 나머지 추진체와 탑재물은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미 북부사령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 성명에서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어떤 파편도 일본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부사령부는 이어 자신들과 NORAD는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북미 혹은 하와이에 위협은 되지 않았으며 이번 발사에 맞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한 요격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하와이 등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입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북부사령부는 또 북한 미사일의 발사시간이 5일 오후 10시30분(미 동부서머타임. 한국시간 5일 오전 11시30분)으로, 이 미사일은 동해와 일본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수행 중인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실패했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북한의 인공위성 궤도진입 성공 주장이 사실과 다른 실패라고 지적했음. 이어 기브스 대변인은 북부사령부와 NORAD의 성명을 인용해 “1단계 미사일은 동해에 떨어졌고 나머지 단계는 나중에 탑재물과 함께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 AFP 통신도 북부사령부를 인용해 북한 로켓의 탑재물이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고 북한의 이번 발사를 실패로 규정했음.
- AFP는 미 북부사령부와 NORAD의 언급은 북한이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한 뒤 나왔다고 보도했음.
- 이에 앞서 북한은 5일 오전 11시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 이와 관련, 하워드 버먼 미 하원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北로켓발사> 美, 유엔서 “강력 대응” 원해(4/5)

-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능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바란다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 대사가 5일 밝혔다.
- 라이스 대사는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찾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日, 동해상 해수면 변색 지점 발견(4/5)

- 일본 방위성은 5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키타(秋田)현 서쪽 300km 지점 동해 상에서 해수면이 변색해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일본 방위성은 “변색이 추진체 낙하의 영향인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변색 지점 주변에 추진체가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음. 이 곳의 수심은 약 3천m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는 5일 오후 이 지점에서 폭 50m, 길이 3km에 걸쳐 바닷물 색깔이 다른 곳보다 연하게 변해 있는 것을 두 차례 확인했음. 이들 해상 주변에는 다른 부유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北로켓발사> 英·日 유엔 안보리 공조 확인(4/5)

- 영국과 일본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데이비드 밀리반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재확인했음.
- 밀리반드 장관은 또 6자회담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의 이행을 바라는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을 지지하고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나카소네 외상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 이해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한이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유감”이라며 러시아는 이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나카소네 외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지역 안정을 훼손했다면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로켓 발사와 관련한 기술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지 판단을 유보했음.

#### ● 클린턴, 中·日·러시아와 北로켓 협의(4/5)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기 앞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동북아를 비롯한 전세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유럽을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북핵 6자회담 주요 참가국인 이들 3개국 외무장관에게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행위를 금지한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달했음.

#### ● 中외교부장, 한·미·일·러와 전화외교(4/5)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5일,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 부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각국에 전달했음.
- 양 부장은 각국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이 실험 통신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이어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유관 당사국에 표명했다”고 말했다.
- 양 부장은 “중국은 시종일관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국들에 모두 이익이 되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관련 당사국이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견지에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당면한 사태에 대응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 부장은 “중국은 이를 위해 각국과 긴밀한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중국은 각국과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은 각국의 입장을 표현하고 유관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 ● <표> 대포동-은하2호 로켓 제원 비교(4/5)

구 분	대포동1호 (광명성 1호 위성 로켓)	대포동 2호 (미사일)	은하2호 (광명성 2호 위성 로켓)	KSLV-1 (한국우주 발사체)
길 이	27m	29~31m	32m(추정)	33m
직 경	1.8m	2~2.2m	2.2m(추정)	3m
중 량	27t	60t(추정)	70t이상(추정)	140t
탄두 (위성중량)	20여kg (추정·위성)	1t(추정·탄두)	30kg(유사한 이란 오미드 위성 27kg)	100kg(위성)
추진체	3단(모두 분리. 위성 궤도진입 실패)	3단(1단 분리도 안돼 추락)	3단(1단 분리. 2-3단 분리 실패 추정)	2단
낙하거리 (최종)	1천620km	490여km	3천100여km (추정)	지구상공 700~800km
발사일	1998.8.31	2006.7.5	2009.4.5	2009.7월말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5/0511000000AKR20090405100400043.HTML>

#### ● “北, 러시아에 로켓발사 사전 통보”(4/5)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러시아에 미리 통보했다고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5일 밝혔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러시아 우주 통제소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위로 날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모든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전하고 각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평가, 가능한 행동을 고려할 때 자제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또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소집에 반대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는 군사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만이



북한 로켓 발사가 군사용인지, 평화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코사체프 위원장은 아울러 “물론 (북한의) 로켓이 탄도미사일 비행 궤도를 시험했거나 다른 비밀 시험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거듭 “오직 군사전문가들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이어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결정이나 제재에 반대한다며 이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北로켓발사> 사르코지 “대북 제재 지지”(4/5)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의 최대 민영방송인 TF1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각국 정부가 단합해 국제 규정을 일절 준수하지 않는 정권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미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사르코지 대통령은 북한을 국제법의 규정 밖에서 행동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한 뒤 “나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들은 이날 오후 7시(GMT) 대북 제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 클로드 게양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프랑스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게양 비서실장은 이어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국제사회에 달려 있다”면서 “프랑스는 당연히 대북 제재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런 대북 제재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프랑스 외교부는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명은 이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1718호의 제재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北로켓발사> 예고 후 신속발표(4/5)

- 지난 2월부터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를 예고했던 북한은 발사 당일인 5일에도 오전 발사 이후 4시간여만에 ‘신속히’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종래와 다른 행태를 보였다.
- 로켓 발사 전엔 비교적 ‘투명’한 모습을 보인 북한은 발사 예정기간의 첫날인 4일엔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발사예정 시간대



인 오전11시-오후4시를 앞두고 오전 10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인공위성을 곧 발사하게 된다”고 예고했음.

- 지난달 12일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메일로 통보한 뒤 이를 역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은 로켓 발사 시점을 4월 4~8일, 매일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라며 궤도 자료도 통보했음. 북한은 이에 앞서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 등록협약 등 국제우주조약들에도 가입했음.
-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이슈가 된 가운데 2월 24일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를 통해 발사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발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앴음. 이에 반해 ‘광명성 1호’ 발사 때와 2006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모두 예고가 없었음.
- 다음은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일지.

▲2009.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발사 “준비작업 본격 진행”중 발표.

▲3. 9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 타격” 위협.

▲3.12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ICAO와 IMO 등에 4월 4~8일 발사 예정 통보.

▲3.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 시하면 북핵 9.19공동성명의 파기와 6자회담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경고.

▲3.26 = 북한 외무성, 조선중앙통신과 문답 형식을 통해 안보리에서 논의만 돼도 핵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는 물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

▲3.3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면 이는 대북 “선전포고”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4. 2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를 통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4. 4 = 조선중앙통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통보’를 인용해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고 발표.  
일본 NHK, 낮 12시16분께 긴급 속보로 “북한에서 비상



체(飛翔體)가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일본 방위성의 판단 오류에 따른 오보로 판명.

▲4. 5 = 北, 오후 3시 28분께 조선중앙통신 통해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 성공 발표.

● <그래픽> 北위성 발사 추진체 낙하 미스터리(4/5)

-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강력히 시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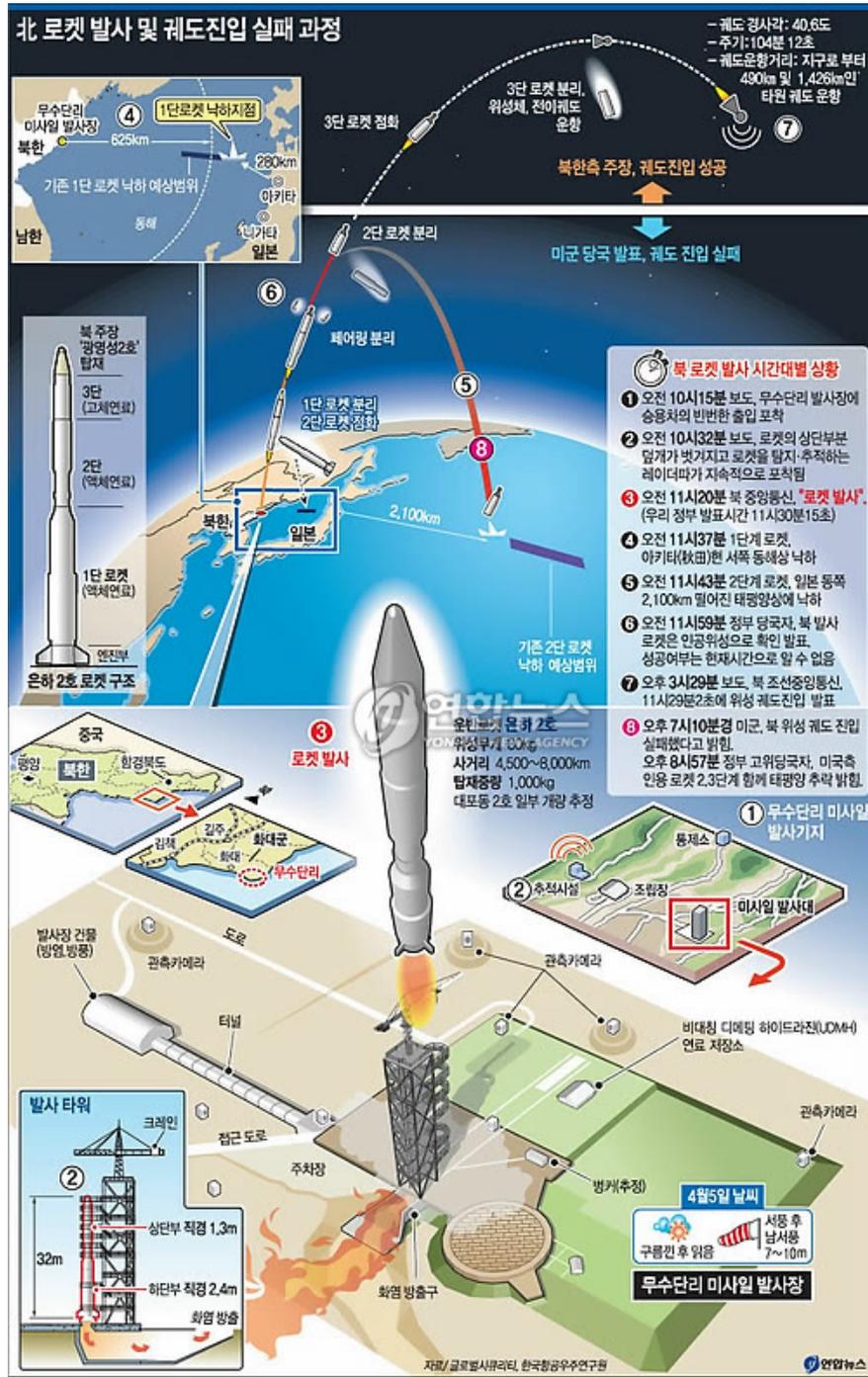


전승엽 기자 kirin@yna.co.kr/ 20090405

출처(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40500120004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405001200044)

● <그래픽> 북 로켓 발사 과정 및 예상 항로(4/5)

- 정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북한의 로켓발사 ‘성공’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는 3단 추진체가 2단과 함께 해상에 추락하면서 ‘위성체’의 궤도 진입도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음.



출처(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40500140004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405001400044)

- <北로켓발사> 美-EU, 北 규탄 공동성명 채택(4/5)
  -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했음. 5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행동이



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미-EU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규범(norm)을 준수하며,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라”고 촉구했음.
- 성명은 “(북한이) 주장한 이번 발사의 목적에 상관없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개발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 주변국 및 원거리 국가들을 위협할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는 의도”라고 규탄했음. 성명은 이어 “안보리 결의가 아무런 처벌 없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가 보여주는 것을 포함,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여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촉구했음.
- 대서양 양안 정상들은 그러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음. 성명은 “미국과 EU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WMD 추구 및 주변국 위협 정책을 포기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음.
- 성명은 이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북한은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이 근년에 성취한 것과 같은 번영과 개발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음.

#### ● 오바마 “北로켓발사, ‘강력한 대응’ 필요”(4/5)

- 북한이 5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럽순방차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규칙을 위반했다. 이 같은 도발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뿐 아니라, (미사일과 같은)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규칙에는 구속력이 따라야 하며,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전 세계 각국에 산재한 수천기의 핵무기를 “냉전이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미국이 내년 중으로 핵무기 감축 문제를 다룰 국



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군, 북한 위성은 궤도 진입 실패” <AFP> (4/5)**

- 미군은 5일 북한 로켓의 탑재물(payload)이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고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미군 북부사령부(USNC)는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 두 사령부는 또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어떤 파편도 일본에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군 측의 이 언급은 북한이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 **<北로켓발사> EU “미사일 활동 중단해야” (4/5)**

- 유럽연합(EU)이 이사회 의장국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체코 정부는 5일 이사회 의장국 성명을 발표하고 “5일 있었던 북한의 ‘통신위성 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EU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 성명은 “한반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핵 문제로 인해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긴장을 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성명은 “이러한 행동은 또 북한이 전 세계 핵확산에 연계된 것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우려를 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성명은 이어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 **<표> 北이 밝힌 ‘광명성’ 1, 2호(4/5)**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은 5일 오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앞서 북한은 1998년 8월 31일에도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임.



- '광명성 1호'와 '2호'에 대한 북한측 발표를 비교.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1호	광명성 2호
발사일시	1998.8.31, 낮 12시 7분	2009.4.5, 낮 11시 20분
운반로켓	백두산 1호(3단계)	은하-2호(3단계)
발사장소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발사장	함북 화대군 동해위성발사장
발사방향	86도	미발표
1단계 분리	발사후 95초 (발사장으로부터 253km 떨어진 북위 40도51분, 동경 139도40분의 동해 공해상)	미발표
2단계 분리	발사후 266초 (발사장으로부터 1,646km 북위 40도13분, 동경 149도7분의 태평양 공해상) *2단계 144초만에 머리부유선체 활개	미발표
3단계	2단계 분리후 27초만에 위성 궤도 진입	미발표
궤도진입 시간	낮 12시11분53초 (발사후 4분53초만)	낮 11시29분2초 (발사후 9분2초만)
도는 궤도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218.82km, 제일 먼거리6,978.2km의 타원궤도	40.6도의 궤도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먼거리 1,426km인 타원궤도
주기	165분 6초	104분 12초
위성전송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물과 함께 '주체 조선'이라는 모르스 전신 부호가 27Mhz로 전송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물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
위성탑재물	필요한 탐측기재들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
의의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 추진과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계산토대 확증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 추진과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
기술	100% 우리 지혜와 기술로 개발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

dh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5/0511000000AKR20090405073400014.HTML>



### ● <北로켓발사> 러 “유엔결의 위반여부 검토”(4/5)

-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이날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긴 것인지를 확인 중”이라면서 “모든 나라에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선부른 대응은 자제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음.
-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당국자의 비공식 입장이지만 러시아 역시 대북 제재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수차례의 ‘당부’ 내지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북측에 상당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만 예상하고 있음.

### ● 오바마 “북한, 핵프로그램 포기해야”(4/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의 연설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핵 비확산 문제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이 북한 로켓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음.

### ● <北로켓발사> 北 “진입 성공” 발표 전문(4/5)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은 5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운반 로켓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3시28분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 2호’는 40.6°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거리 1,426km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이다.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 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운반로케트 ‘은하-2호’는 3계단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에 아버지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룩된 우리 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이번 위성발사의 성공은 총진군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주체98(2009)년 4월 5일 평양』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5/0511000000AKR20090405064700014>.  
 HTML

● 北 “인공위성 궤도 진입 성공”(4/5)

- 북한은 5일 오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3시 28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제목의 ‘보도’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 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3단계로 된 은하 2호가 5일 오전 11시 20분 발사돼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거리 1426km인 타원 궤도를 돌고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라고 말했다. 통신은 또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고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있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리용하여 UHF 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통신은 밝혔다.



● <北로켓발사> 오바마 대북성명 전문(4/5)

-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체코를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한 도발적 행위라고 북한을 비난했음.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전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오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도발적 행위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했고, 자제에 대한 명확한 요청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켰다.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기 위해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즉각 협의를 할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적인 도발 행동을 하지 말것을 강조한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높은 우선 순위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와 안정 유지를 전적으로 다짐하며,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긴장을 줄이며 북한과 주변 4개국 및 미국 간의 다른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한 편입되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jh@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5/0511000000AKR20090405049500071>.  
HTML

● <北로켓발사> 日, 대북 추가 제재 착수(4/5)

- 발사 자제 촉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각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임.

- 정부 대변인 겸하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인공위성이라도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촉구한 유엔안보리 1718호에 위반된다는 입장에 따라 강력한 유감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며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음.



- 일본 정부는 우선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각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정식 결정함.
-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선박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를 그동안은 6개월 기한으로 연장해왔음.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제재의 성격을 담아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로켓발사> 국제사회의 현행 대북제재들(4/5)

- (서울 AFP=연합뉴스) 북한이 5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국과 미국·일본 정부는 즉각 북한의 행위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아울러 일본은 4월 13일 만료 예정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로켓 발사 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재에 더해 추가 조치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음.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에 적용 중인 각종 제재는 다음과 같음.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에는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그해 10월 14일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음.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 사치품을 수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북한의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 자산에 대한 동결, WMD 프로그램 관련 인사에 대한 여행제한 등의 조치 역시 1718호에 포함돼 있음.
-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해 노동 및 스커드급까지 포함한 총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채택됐음.  
유엔 결의 1695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북한에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대량 파괴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 반입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미국의 대북 제재 =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인 지난해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역시 종료했음.  
그러나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미 다트머스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



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약 40여 가지의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일본의 대북 제재 = 일본은 지난 2006년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자체 대북 제재안을 마련, 북한 제품의 수입 및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음.  
일본은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쇠고기와 캐비아, 참치, 고급 승용차, 오토바이, 카메라 등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rainmaker@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5/0511000000AKR2009040504860009.HTML>

● 軍 “한미 연합미사일 전력증강 검토”(4/5)

- 국방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준장)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가진 бри핑에서 “군사전략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전시에 미국 증원전력 전개와 지연문제와 한미 간 작전 지속능력 유지에 있어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배치 등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개념의 전력 증강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사실상 성공한 상황에서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내의 미사일 개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김 처장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미사일인지 위성인지 또 성공했는지 여부, 1-2단 로켓의 정확한 낙하지점 등에 대해선 “분석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 <北로켓발사> 평광첸 “6자회담 영향력 강화 노력”(4/5)

- 중국의 저명한 군사전략전문가인 평광첸(彭光謙) 인민해방군 소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6자회담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평 소장은 특히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며 동해에 최신예 이지스함들을 파견한 채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실제 의도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통신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신화통신과 4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통신위성을 시험발사한 것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고려와 준비를 거친 것이며 국내적, 국제적 효과를 노리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평 소장은 “북한은 위성 강국의 꿈을 실현하며 2012년 김일성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민족정신과 사기를 고양해야 한다”면서 “국내적 요인으로 보면 북한은 전체 발전전략에 따라 로켓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국제적 요인으로 본다면 북한은 이번 위성 시험발사를 통해 6자회담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는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태도를 시험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평 소장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이 강화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평 소장은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일본이 초강경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만약 북한이 로켓 발사에 실패해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평 소장은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일본이 초강경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 “만약 북한이 로켓 발사에 실패해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일본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일본 정국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지지도가 높지 않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 정부가 이번 로켓 발사를 지지도 만회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오바마, 北로켓 ‘도발적’..유엔결의 위반(4/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으로 규정하고 로켓 발사 행위가 명백한 유엔안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 로켓 발사 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운송수단의 확산 방지는 미 행정



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과제”라며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해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관련, 그는 “비핵화 달성과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과 주변 4개국 및 미국 간의 다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제공해왔다”고 말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이후에도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북.미관계 현안을 처리나갈 것임을 시사했음.

#### ● 유엔 안보리 내일 새벽 소집(4/5)

- 일본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 6일 새벽(한국시간)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임. 유엔 한국대표부 김봉현 차석대사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측이 4일 밤 11시5분께(현지시간) 의장국인 멕시코 대표부에 팩스와 이메일, 전화를 통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됐다”고 밝혔음.
-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표부의 마르코 모탈레스 대변인도 “우리는 소집 요구서를 받았고, 회의가 내일 오후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음.
-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서 의장 성명 채택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AP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관의 말을 인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이 나라들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 日 정부 “북 로켓 요격 안해”(4/5)

- 일본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북한에서 ‘비상체(飛翔體)’가 발사돼 일본 동북부 지역 상공을 통과 태평양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하고, 추진체 가운데 1단계는 아키타(秋田)현 서부에서 280km 떨어진 동해상에, 2단계는 일본 동부에서 2천100km 이상 떨어진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토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로켓 발사에 따른 추진체나 파편이 일본 영역에 낙하하지 않음에 따라 항공기나 선박을 포함한 일본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했음.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곳은 미국 조기경계위성이었음.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확인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유감이다.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인공위성으로 최종 확인된다고 해도 ‘탄도 미사일 계획에 관한 모든 활동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보고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위해 미국, 한국 등과 공동 대응키로 했음.
  -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북한의 이날 로켓 발사 정보가 확인된 이후 일본 영토와 영해, 항공기 및 선박의 안전 확인, 관련 정보 수집 강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지시했음. 이에 일본 정부는 곧바로 총리실에 대책실을 설치했고 오후에는 관계 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음.

#### ● <北로켓발사> 러’ 전문가들 “제재엔 신중해야”(4/5)

-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5일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 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의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응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탑재해 로켓을 발사했다면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한 만큼 1718호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북한이 국제사회가 정한 룰을 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의도에 대해 보론초프 과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 유리한 패를 잡으려는 것도 있지만, 북한 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체제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그는 또 “대북 제재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국제사회는 제재에 따른 긴장 고조를 고려해야 하며, 북핵 6자회담의 근간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툴레라야 박사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긴장을 불러 일으킨 이번 발사는 정치적으로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음. 툴레라야 박사는 그러나 이는 곧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아직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할 프로세스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새로운 비장의 카드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려면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제재와 압박은 의미가 없으며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예를 들어 6자회담 나머지 5개국이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 조건으로 자국의 발사대에서 로켓을 발사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톨레라야 박사는 “러시아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발사를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대(對)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6자회담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 <北로켓발사> 미사일 개발·발사 일지(4/5)

-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북한이 5일 오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1998년과 2006년에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음.

- ▲1975 = 중국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해 미사일 연구 시작
- ▲1981 = 이집트서 24기의 스킨드 B형(R-17E) 미사일 및 발사대 도입해 모방생산 착수
- ▲1984 = 스킨드 B형 복사형인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킨드 A형 개발 및 발사시험
- ▲1985 = 사거리 320~340km의 개량형 스킨드 B형 미사일 개발
- ▲1989 = 사거리 500km의 스킨드 C형 미사일 개발
- ▲1993.5 =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사거리 1천 300km 추정)
- ▲1998.8 = ‘대포동 1호’ 발사(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주장. 사거리 1천800~2천500km,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미사일)
- ▲1999.9 =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북·미 합의 결과)
- ▲2001.5 =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럽연합(EU)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 까지 시험발사 유예하겠다”고 천명
- ▲2002.9 = 북·일간 평양선언에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 삽입



- ▲2003.2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2003.3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웬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2003.4 = 서해상에서 육지로 사거리 60km의 실크웬 미사일 시험 발사
- ▲2003.10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중국제 실크웬 추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 ▲2004.5 = 북·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2002.9) 내용 재확인
- ▲2005.2 = 美 중앙정보국(CIA) 포터 고스 국장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2005.3 = 北외무성 비망록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북)·미 사이의 대화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도 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
- ▲2005.5 = 北, 동해상에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 ▲2005.6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에게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정 장관이 전함
- ▲2006.3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 발사(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의 개량형인 KN-02과 유사형)
- ▲2006.5 = 日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보도
- ▲2006.6.12 = 美관리 “北 ICBM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 언급
- ▲2006.7.5 =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 노동 및 스커드급 등 총 7발 발사
- ▲2007.5.25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2007.6.7 = 서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2007.6.19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2007.6.27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KN-02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2008.3.28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 ▲2008.5.31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2008.10.8 =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2009.4.5 = 北, 오전 11시30분 15초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

zoo@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4/05/0511000000AKR20090405041200014.HTML>

● <北로켓발사> 美 한반도 전문가들 분석(4/5)

-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상정을 통해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했음. 이들 전문가는 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회견에서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온 만큼, 북.미관계가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곧바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음.
-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이 계속 견지해 왔음. 따라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미 양자회담이나 6자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음.
-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미·일 3국은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즉각 안보리 결의를 통한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구체적으로는 “유엔 결의 1695호와 1718호의 완전한 이행과 추가적 처벌을 부과하는 후속 결의안을 촉구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음.
-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이나 기술 획득이나 수출을 금지하고 이와 연관된 북한인이나 외국인, 기업, 국가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기존의 유엔결의 의무사항을 전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6자회담 재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6자회담과 미사일 문제가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고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유엔결의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면 6자회담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왔고 최근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은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유화적인 태도만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센터 소장 =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초기 대응은 안보리에서 시작될 것으로 봤음.
-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에 대한 초기 대응조치는 안보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어 후속조치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또 “이번 로켓 발사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안정을 해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과 북·미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뛰어 넘어서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음.
- 이런 점에서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반대로 돌리고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면서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는 핵과 미사일 확산문제 대처를 포함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번 북한 로켓 발사 강행 이유를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요인에서 찾았음.
- 그는 “북한이 이번 발사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2차적인 목표로 인식했을 수도 있지만, 로켓 발사를 강행키로 결정은 무엇보다 내부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이 때문에 외부에서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낮았던 것”이라고 분석했음.
-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부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의 초점은 2006년의 제재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행하도록 하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관계없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북한은 북·미양자회담 개최를 희망하면서 유감스럽게도 6자회담에서 완전히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구실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왔다”고 말했음.
- ◇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 리비어 회장은 “북한 로켓 발사 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많은 나라가 이 문제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로 본다”고 밝혔음.
- 리비어 회장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추가 제재가 담긴 새로운 유엔결의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렵고 기존 결의인 1718호의 규제 이행 요구가 담긴 의장성명 발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 뒤에도 미국은 6자회담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고 아마도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용의를 보일 수도 있지만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훨씬 더 경색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음. 그는 이어 “미국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중단하거나 그만두려고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음.



● 日,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4/5)

- 일본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측이 밝혔다. 대표부 김봉현 차석 대사는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측이 오늘 밤 11시 5분께 의장국인 멕시코 대표부에 팩스와 이메일, 전화를 통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김 차석대사는 “비공개회의가 5일 오후쯤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 파악과 발사 이후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그래픽> 日,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4/5)

- 일본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 6일 새벽(한국시간)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장성구 기자 sunggu@yna.co.kr/ 20090405

출처(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40500060004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405000600044)



### ● 美 “北로켓발사 확인..유엔결의 위반”(4/5)

-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오전 11시30분)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공식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국무부는 미국의 거듭된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도발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 국무부 상황실의 프레드 래시 대변인은 이날 콘퍼런스콜을 통해 “이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서 알고 있다. 앞으로 며칠안에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안보리에 상정하는 등 가능한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 이어 그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도발 행위”라면서 “북한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美 북한 통제하려면 중국 끌어들어야”(4/3)

-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적절히 제어하려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끌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의 도널드 그로스 연구원은 3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며 “이제 중국을 불러들일 때”라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단순히 반응하기만 할 뿐 상황이 계속 악화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함.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은 자칫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을 탈퇴하도록 부추기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함.
- 그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고 6자회담을 진전시켜야 할 시점에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2006년 핵실험이 있는 뒤 일어난 것처럼 장기적인 경색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자회담을 비롯한 중요한 외교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길 수 있다는 것임. 이를 막기 위해 그는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베이징을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미국이 중국을 이용할 것을 제안함.



- 그러면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설득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6자회담의 배후에서 북한에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그로스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의 강한 노력은 새 시대 미·중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안보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이 미국에는 급선무라고 강조하며 글을 끝맺음.

#### ● 中, 대북제재 동참여부 입장표명 거부(4/2)

- 중국은 2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제재에 동참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함.
- 친 대변인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중국측은 관련 사태 전개 과정을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이어 “관련 당사국들은 현재 정세 하에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하며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함. 친 대변인은 “각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북핵 6자회담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함.

#### ● “美공화당, 대북 경제제재 해제금지 추진”<RFA>(4/2)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미 행정부가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외교위원회의 공화당측 간사인 로스 레티넨 의원의 주도로 성안된 법안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이고 미국인 여기자를 억류하는가 하면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했다고 미 의회 관계자는 설명함. 그는 입법을 추진중인 의원이 모두 공화당 의원들 뿐이어서 현재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 현재로선 높지 않지만 북한이 실제로 로켓을 발사한 뒤 대북 여론이 나빠지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함.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북 보상책과 관련,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

#### ● “北, 오바마-유엔 대응의지 시험”(4/2)

- 북한의 임박한 로켓발사는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결의안 위반에



대한 제재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1일 지적함.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재단 회의실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앞두고 아시아지역 국가 특파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후보시절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유엔의 의지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이내에 구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1960년대초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베를린 위기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만들어 시험했던 것처럼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을 시험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유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로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레토릭(수사)’과 ‘행동’이 같은지를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위반에 대해 확고한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엔 결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국가들의 핵보유 야심을 억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북한의 발사체를 둘러싼 ‘미사일-인공위성’ 논란과 관련, 클링너 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해 어떤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금지돼 있기때문에 유엔 결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함.
-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요격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 군당국자들의 입장표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북한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처음에는 이를 확대 해석하고 지금은 축소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함.

#### ● “北, 로켓 연료주입 시작”(4/2)

- 북한이 발사준비중인 장거리 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일 군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로켓에 대한 연료주입은 북한이 주장해 온 ‘위성발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군 당국자는 밝힘.
- 이 당국자는 로켓의 3단계에 해당하는 상단 부분이 아주 최근에 올려졌지만, 인공위성 사진 판독결과 이 부분이 덮개로 가려져 있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함. 당국자는 다만 ‘둥근모양’의 덮개가 씌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들어 탑재물이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소식통들은 탑재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주장해 온 대로 그것이 위성임을 의심할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함. 북한은 이달 4~8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옴.

- 그러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요격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밝혀 군사적 대응은 없음 것임을 예고함. 게이츠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군 당국이 이미 북한의 로켓을 인공위성으로 파악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격 가능성을 일찌감치 배제했다는 관측을 낳았음.

#### ● 美의원16명, 오바마에 ‘北로켓 요격’ 촉구(4/2)

-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1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요격권한을 미군 사령관들에게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힘. 존 맥휴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북한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위기에 처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사령관들에게 승인토록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힘.
- 이들은 일본 정부가 로켓이나 파편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요격 명령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비슷한 결정을 내리도록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함. 의원들은 또 “북한의 로켓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에 빠뜨릴 경우 취할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과 준비된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함. 이번 서한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요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데 따른 반발로 해석됨.
-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번 발사의 목적과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확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 “미국은 일련의 도전적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국가의 모든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미국민과 동맹국들의 안전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함.

#### ● 오바마, ‘北로켓’ 안보리회부 中에 통보(4/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북한이 예정대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방침임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했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가 밝힘. 이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런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중국이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그는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를 막는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소개, 중국측의 반대의사가 없음을 확인함. 다른 관계자는 북한 로켓 발사 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안보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우리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은 명확히 했다”면서 “이(로켓 발사)는 역내에 도발적인 행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배치된다.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뒤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 수단·의 다르푸르 위기를 포함해 지역 갈등 해소와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핵문제 협력에 두 정상은 합의했음을 전함.

#### ● “北로켓, 동북아 새로운 긴장 조성”<NYT>(4/1)

-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사설을 통해 주장함. 사설은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가 실패해 파편이 영토로 떨어질 경우 미사일을 파괴하도록 군에 명령했으며 미국은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 소개함.
- 사설은 이어 “북한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무모한 행동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고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설은 그러나 이처럼 위험한 부정행위는 2006년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표준절차’라며 “지난해 뇌졸중을 앓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도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분석함. 오바마 행정부의 의제에 ‘북한 문제’를 올리거나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사이 불화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함. 사설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사설은 또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테스트한다면 모두 함께 분명하게 규탄해야 한다”며 “확고하고 지속적인 (대북) 관여가 북한의 핵 야망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최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비해 국제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면서 지나친 반응은 6자회담을 좌초시킬 수 있고, 어쩌면 전쟁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함. AFP 통신에 따르면 ICG는 1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안보위험이 조금 증가할 뿐이라며 과잉 대응은 평양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함. ICG는 특히 최악의 경우 미사일방어(MD)에 나선다면 한국과 일본, 세계경제를 황폐하게 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외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과거 행태와 유사하다면서 주변 5개국이 “북한의 도발”에 차별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함. ICG는 나아가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탑재하고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시험했기 때문에 대포동 2호가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AFP 통신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일본의 평화헌법 입장에 과제를 던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자세히 실기도 함.

#### ● “北, 점점 핵능력 포기않으려는 듯” <美보고서>(4/1)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협상에 나서야 하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제안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New Beginnings Policy Research Study Group)’은 31일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함.
-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 소장,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함. 보고서는 대북 문제와 관련, 확실한 군사적 옵션이 없고 제재도 제한된 효과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하며, 그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협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함.
- 보고서는 “북한은 점점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북한 관리들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최근 미국측에 했고, 핵프로그램 불능화를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또 핵확산을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량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이 묵인했다는 의심이 한일 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결코 그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야만 한다”고 밝힘.
-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향후 불안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 뒤 “그런 비상상황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준비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질서가 무너졌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최고위급에



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가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위기설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감독 하에 세습 절차가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 같은 과도기에 대한 북한의 민감함이 거친 언사와 도발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주요한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이밖에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떠받칠 것이라고 촉구함. 또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맹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 ● 김정남 “日 정부 대응 자위 위해 당연”(3/31)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정남(正男)씨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나는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후지TV가 31일 보도함. 방송에 따르면 김정남씨는 30일 마카오로 가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이 방송 보도진과 만난 자리에서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위성’ 발사를 한다고 (북한이) 밝히지 않았냐”며 “그것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말함.
- 그는 또 ‘일본 정부의 대응이 과장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행동은 자위를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일본이 ‘광명성 2호’를 요격하면 북한은 이를 재침략으로 간주해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임. 그는 이어 베이징을 떠나 마카오에 도착한 뒤 ‘북한이 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 6자회담과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정남씨는 또 ‘최근 공개된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보면 많이 야윈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진다. 나는 뚱뚱한 것보다는 마른 편이 좋지 않냐”며 “아마 아버지(김정일 위원장)가 피곤했었던 것 같다. 격무 때문이다”라고 말함. 그러나 그는 ‘뇌졸중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에는 답할 수 없다. 매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함.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내달 4~8일엔 북한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 <러’ 전문가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3/30)

- 북핵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상황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끌었음. 30일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전(全)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한국학자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그 관점과 해결 방안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임.

- 이 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빈 한국문제 연구센터 소장은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문제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러시아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함.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부시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아예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플루토늄 개발 중단, 북한 비핵화 1단계 성공에 만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그러나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 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 과장은 “오바마에게 많은 것은 기대했지만, 실망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오바마와 부시의 정책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부시의 정책 때문에 북핵 문제가 일어났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아직 오바마 정부의 대(對) 북한정책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제빈 박사의 말을 반박함.
- 그런가 하면 평화적인 목적의 핵실험은 인정해야 하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됨.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 비핵화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다”며 “북한은 평화적인 핵실험을 할 권리가 있고 그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함.
- 극동문제연구소 김 예브게니 선임연구원은 한 걸음 더 나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여겨서는 안 되며 북한만 무책임한 국가로 몰아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길 바란다면 다른 나라도 핵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함. 또 극동문제 연구소 미하일 찌타렌코 소장은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 세계를 위협하게 만들고 있고 상황은 다시 또 예측할 수 없게 돼 버렸다”면서 “북한이 위성 문제로 다시 한 번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무도 북한 위성 제조를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6자회담의 존재와 목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러시아는 6자회담이 끝나는 않는 방향으로 외교를 펼쳐야 하며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통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 WSJ “北 미사일 요격해야”(3/31)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4월 4~8일로 예고한 로켓 발사와 관련, 이를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함. 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시험이라면서 미국 새 정부에 대한 명백한 시험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적합한 대응은 이를 요격하는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의 이런 반응은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이 29일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하와이 등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요격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데 따른 것임.
- 신문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 같은 미지근한 대응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우방인 일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일본은 요격을 위해 정교한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전함 3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고 설명함. 신문은 핵 및 다른 군사 프로그램을 서방으로부터 보다 많은 돈과 인정을 받아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일상적인 것이라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때도 같은 책략을 썼던 북한이 이제는 오바마 정부에게도 같은 대가를 지불토록 위협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과 함께 미사일을 격추시켜야만 한다면서 그리고는 부시 행정부 때의 거래에서 손을 떼고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이는 더 엉터리 외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와 함께 신문은 별도의 기사에서 게이츠 장관의 발언과 관련, 많은 아시아 전략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무력함이 일본과 한국을 보다 정교한 자체 무기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부시 전 행정부에서 대북 전략을 맡았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무력함은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신문에 말함.
- 한편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미·일은 북한에게 시험 발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해왔다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추려는 야망을 가진 북한을 오바마 대통령이 다루는데 있어 첫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함.

#### ● 北 “南PSI 참여는 선전포고..즉시 단호대응”(3/30)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이미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남한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과국에 이른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내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이 담화는 “오늘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소동과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PSI 참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 담화는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은 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강성대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문제시될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지난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PSI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참여만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음.

### ● 주한영대사 “‘北로켓’ 강력대응 필요”(3/30)

-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30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강력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유든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는 결국 (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강조함.
- 그는 그러나 간담회가 끝난 뒤 오찬 자리에서 북한 로켓 발사시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도출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유든 대사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성명도 도출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유든 대사는 ▲세계 경기 부양 ▲금융 부분 강화 ▲보호주의 예방 등이 가장 중요한 회담 목표라고 소개하고 “각 목표를 위해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보호주의적 조치의 철회’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유든 대사는 또 ‘그린 경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합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가 온실 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고든 브라운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 ● “중국의 대북 영향력 제한적” <전문가들> (3/30)

- 중국이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임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함. 이 같은 분석은 내달 4~8일 사이로 예정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중국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공공정책연구소(IPS)의 존 페퍼 국제문제 담당국장은 북한이 ‘오래된 형제 국가’의 압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외교 관계를 원치 않고 있다면서 양국의 역사적 관계나 이념적 동질성이 더 이상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힘.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 역시 AF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북한이 중국에 예속된 관계라고 보는 건 지나친 것이라고 말함.
- 이 전문가는 그러나 중국이 아직 북한과의 다양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에 신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호주국립대학의 레오니드 페트로프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핵무기 관련 물질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음.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수준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점잖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내놓지 않고 있음.
- 한국, 일본, 미국 등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이 연일 유엔 제재 방안, 로켓 요격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은 상당히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임.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함. 페트로프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침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라는 형태로 중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비군사적 영향력)’를 높여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함.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독자 행보를 늘려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미리 알리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고 덧붙임.
- 한편, 북한이 끝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공중 요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련, 러시아의 군 고



위인사가 28일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나섬. 아나톨리 노고비친 러시아 연방군 부참모장은 이날 러시아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자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힘.

- 그는 자신이 최근 프랑스 의원들과 만나 프랑스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80%가 원자력 발전에 의한 것인데, 왜 다른 국가의 핵 프로그램 연구에는 반대하는지 물었던 점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이것이 이중 잣대이며, 국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 ● 게이츠 “美, 北 미사일 요격 않을 것”(3/30)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힘.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이 지금 당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함.
- 게이츠 장관은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로켓 발사시 요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한 것처럼 보이는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그런(요격)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힘. 앞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이를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9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 왔음.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 어떤 것을 할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 그는 이어 “미국은 이번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사거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함. 그는 또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갖는 것이 북한의 “장기적 의도”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당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말함. 이 밖에 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매우 골칫거리”라면서 “북핵 6자회담이 최근에 어떤 진전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함.
- 게이츠 장관은 “이번과 같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위협하는 것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일의 선물이라면 이는 외교적 교섭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많이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어떤 것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발사가 이뤄질 경우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음.

#### 나. 미·북 관계

##### ● 北 “미국이 결정하면 미군유해 발굴 재개”(4/3)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가 북한은 한국전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재개 여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함. 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협회’ 프랭크 미터스키 워싱턴지부장은 2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발굴에 관한 청문회에서 김명길 공사를 지난 1일 만났을 때 김 공사가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한 쪽은 미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힘.
- 그는 “김 공사는 한국전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의 재개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그는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하려면 미국 정부가 하루빨리 발굴 요원을 북한으로 다시 들여보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함.
- 미국은 1996년부터 북한에 장비와 인원을 보내 공동으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진행, 약 220여구의 시신을 발굴했지만 2005년 북핵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미측 작업인력의 안전 등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함.

##### ● 부시, 임기말 북한 등 8개국 종교자유침해국 지정(3/31)

-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불과 4일 전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8개국을 종교의 자유 침해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30일(현지시각) 밝힘.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은 지난 1월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수단 8개국을 종교인들을 학대할 우려가 있는 나라로 지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전함.
- 이 문서에서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잠재적인 제재 방안을 폐기함.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월 말께 의회의 주요 멤버들에게 보고됐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지난 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짐.
- 의회가 권한을 위임한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정부에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권고를 하는 독립 기관이다. 위원회는 부시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없애고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심각한 다른 나라들을 목록에 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정부의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기에 굳이 재지정을 한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위원회의 펠리스 게어 위원장은 “우즈베크와 사우디 같은 나라의 종교 상황은 무시무시하며 미국 정부의 특별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위원회가 이라크,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을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희망해왔다고 밝힘.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06년부터 종교의 자유 침해국을 지정해오고 있으며 2006년 당시에 이밖에 재지정한 나라와 같은 8개국을 ‘특정 우려국가’로 지목했었음.

#### 다. 일·북 관계

##### ● 日, 北로켓발사시 제재 1년 연장(4/2)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 조치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함.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각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정식 결정함.
-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선박 전면 입항금지과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는 그동안 반년마다 연장돼 왔으나 이번 로켓 발사시 추가 제재의 성격을 담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사치품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대북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현재 북한으로의 연간 수출이 8억엔 정도에 불과한데다, 그것도 일본에서는 폐기 직전의 중고 자전거 등의 중고 일상용품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일본 정부는 이같은 단독 제재와는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며 새로운 결의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북한에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사치품의 수출 금지를 가맹국에 의무화한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전해짐.
- 안보리 결의 1718는 대량파괴무기(WMD) 계획에 관련된 개인과 법인의 금융자산 동결, 관계자의 입국 및 통행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라. 기타

### ● 北-유니세프, 10월 주민영양 조사<RFA>

- 북한 당국이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북한 전역에서 주민 영양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북한 당국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미국과 합의했던 주민영양 조사는 이행하지 않은 채 유니세프와는 조사 규모, 지역, 대상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방송은 유니세프의 고팔란 발라고팔 평양사무소 대표의 말을 인용, 이번 조사는 2004년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조사보다 큰 규모로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함경북도와 양강도도 포함해 북한 전역에서 어린이와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함.
- 유니세프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진 여성과 7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한번씩 영양조사를 실시했으나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그 이후 중단됨. 올해 5년만에 영양실태 조사가 이뤄지면 지난해 유엔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15년 만에 이뤄진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엔농업기구 및 세계식량계획의 주도로 4년 만에 재개된 수확량 조사에 이어 세번째 재개되는 대규모의 현지 실태조사가 됨.

### ● “中 국경 경유하는 탈북자 급감”<마이니치>(3/30)

-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30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탈북 비즈니스의 최대 거점인 중국 지린(吉林)성 옌벤(延邊)에서는 요즘 탈북자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거의 정지된 상태임.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경경비가 강화된데다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브로커들에게 전달할 돈이 끊겼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현지 공안 관계자는 이 신문에 “북한에서 탈출해 오는 사람이 최근 1년 크게 줄었다”고 말함.
- 현지에서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는 한 50대 남성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북한의 협력자와 연대해 국경탈출을 안내하는 월경반과 자신과 같은 수송반, 옌지(延吉)내 아파트에 있는 아지트 관리반, 베이징(北京) 등 원거리 수송반 등으로 주로 구성됨. 이들은 탈북자가 한국 망명에 성공했을 경우 주로 한국 지원단체로부터 상당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다고 신문은 전함.
- 그러나 한국의 경기가 악화하면서 한국의 종교 관련 단체나 기업, 개인기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수수료가 거의 끊기면서 이들의 활동도 거의 중단된 상태임. 또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지원단체를 거쳐 수수료 지급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알려짐. 브



로커 남성은 자신들의 안내가 없이는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움직인다. 다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정상, 동맹미래상 조율>(4/2)

- 한·미 정상은 2일 런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긴밀히 조율함. 한·미 양국은 버락 오바마 미 정권 출범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나 정상간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의지를 다졌지만 정상간 만남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름.
-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부시 전 대통령때보다는 한·미 간 찰떡공조가 다소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이를 불식시켰다는 분석임.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친구 중 하나”라고 평가한 것도 탄탄한 한미동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라는 평가임. 그는 회담에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말로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함.
- 특히 한·미 간 인식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던 북한문제와 관련, 양 정상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호흡의 일치’를 과시한 점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양 정상은 또 이런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 당시 한·미 간에 채택키로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동맹의 내용을 문서화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연내 채택하기 위한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기회에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오는 6월16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정부는 그때쯤 돼야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이 정비되고 대북 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돼 충실한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방미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오바마 대통령도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

- 물론 부시 전 정권 8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색채를 가미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임. 이번 회담에서 세부적인 동맹 이슈는 구체적으로 다루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정상간 만남인데다 시간도 넉넉치않았기 때문임.
-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진 것으로 알려짐.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20여명 수준인 아프간 민간재건팀(PRT) 규모를 지금의 4배 수준인 90여명으로 늘리고 임무도 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미국이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함. 이 밖에 한.미는 기후변화와 대테러 문제 등 범 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 美 랜드연구소에 한국정책석좌연구직 설치(3/31)

- 미국의 권위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에 한국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석좌연구직이 신설됨.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이사장과 랜드연구소 제임스 톰슨 소장은 30일 오후 6시(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타모니카에 있는 랜드연구소에서 한국정책 석좌연구직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국제교류재단은 이 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연구소에 설치된 석좌연구직 운영을 위해 100만 달러를 5년간 분할 지원하게 됨. 랜드연구소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자체 출연한 100만 달러와 익명의 기부자가 제공하는 100만 달러를 합쳐 총 300만 달러로 석좌연구직을 운영할 계획임.
- 외국 정책연구소에 한국정책 석좌연구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임 이사장은 “그동안 랜드연구소의 연구 성과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중요시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랜드의 한국 관련 연구물이 미국 정부에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임 이사장은 “이번에 미국 서부지역에 먼저 한국정책 석좌연구직을 만들었고 곧 동부지역에도 석좌연구직을 하나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임.
- 랜드연구소는 이날 한국정책 석좌연구직에 함재봉 연구소 수석정치학자를 임명, 발표함. 함 박사는 “연구소에 처음 한국정책 석좌가 설치된 만큼 그동안 분산됐던 연구역량을 총체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랜드연구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국정책에 필요한 연구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나. 미·중 관계

### ● 오바마, 하반기 중국 방문(4/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백악관이 1일 밝힘.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후 주석이 올해 하반기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함.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국가 방문도 잇따라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백악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런던에서 후 주석과 만나 북한과 이란 핵 문제, 수단의 인도주의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도 가능한 한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또 무역·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보호주의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미국 대표로 참가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이번 여름에 워싱턴에서 열기로 합의함.
-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확고하게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미중 무역관계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함.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대해 “아주 건설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경제관계는 매우 강력하며 미·중 관계는 양국 국민들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가 많은 도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함. 이와 함께 이번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기축통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 “美부통령-中총리 새 대화채널 5월 가동”(4/1)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미·중간 새로운 최고위급 대화채널이 5월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1일 보도함. 명보는 중국의 ‘21세기경제보도’와 소식통을 인용해 원자바오 총리와 바이든 부통령을 대표로 하는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대화창구가 5월중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미국은 이미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중·미전략경제대화’와 미 국무부의 주도의 ‘중·미전략대화’를 하나로 통합해 ‘중·미 전략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대화채널을 가동하자는 뜻을 전했으며 이에 중국도 동의했다고 명보는 말함. 이와 관련, 베이징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한



교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 현안을 주로 다루게 되는 반면 원자바오 총리와 바이든 부통령 간 채널에서는 경제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2일 회담, 양국간 현안과 함께 미·중간 새로운 대화채널 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 ● “中, 4월말 美에 대규모 구매사절단 파견”(3/31)

- 중국이 내달 하순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한다고 중국 21세기경제보도가 31일 보도함. 중국 상무부가 각 기업과 기관에 전달한 무역·투자촉진 활동에 관한 통지문에 따르면 내달 하순 상무부가 인솔하는 중국 기업의 구매사절단은 워싱턴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을 열흘 일정으로 방문, 투자계약 체결, 경제포럼, 투자설명회 개최, 정·재계 인사 면담, 주요기업 시찰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 이번 구매사절단은 미국 제품 수입을 희망하거나 대미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콩, 면화, 항공, 전신 분야 제품의 구매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됨. 신문은 이번 구매사절단의 파견이 관례적으로 중·미 전략경제대화(SED) 개최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르면 6월 초에 중·미 양국의 격상된 전략경제대화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갖는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대화채널의 형식과 수준이 결정되었지만 상무부가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볼 때 격상된 제1회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이르면 6월에 거행될 수 있다”고 전망함.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은 전략경제대화가 열리기 전에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 162억달러(2006년), 326억달러(2007년), 136억달러(2008년) 어치의 미국 제품을 각각 구매해 중·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스처를 취해옴.
- 최근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간 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대체할 새로운 대화 형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시사함.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현재 부총리급의 전략경제대화과 차관급의 전략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해 부통령-총리급의 새로운 대화채널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 미·러 관계

### ● 미·러, 핵무기 감축협상 재개 합의(4/2)

- 미국과 러시아는 12월 시효가 만료하는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1)을 대신할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상을 재개하기로 1일 합의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영국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열어 핵무기 감축 협상 재개를 포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1994년 발효된 START-1을 대체할 전략무기 제한 및 감축에 관한 포괄적이며 합법적인 협정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함. 또 양국은 즉각 실무 차원의 협상에 착수, 오는 7월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오는 12월5일 협정 만료 전까지 새로운 협정을 내 놓기로 함.
- 미국과 러시아는 옛 소련의 붕괴 전인 1991년 핵탄두 보유 한도를 6천 개로 제한하는 START를 체결했었음. 이후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양국의 핵탄두 보유 한도를 각 2천200개로 줄이기로 함.
- 특히 부시 정권에서 미국은 이란의 핵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동유럽에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추진했고 러시아는 이의 포기나 명시적 규제를 핵 감축협상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이를 대체할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함.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군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MD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자세를 보이면서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됨.
- 이날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감축 핵무기 숫자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1천500개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또 두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장기 목표 하에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특히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발사 자제를 촉구함. 두 정상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가 역내 평화와 안보에 악영향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발사를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 북한은 오는 4~8일 사이 통신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지만 미국, 일본, 우리 정부는 이번 로켓 발사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쏘아 올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함께 양국은 MD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함.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 "오늘 우리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시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우리가 서로 적(敵)으로 보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으며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낙관한다"고 밝힘. 양국 관계는 미국의 MD 계획,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 그루지야 전쟁, 이란 핵 프로그램 등으로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를 보였으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화해 분위기가 급속도로 조성됨.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7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달라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 메드베데프 “미·러 협력효과 지대”(3/31)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유대강화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호 증진이 전략적 안정성과 핵 안보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가 임박한 31일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최근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기지 구축 유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함.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간 관계의 소원과 무관심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이어 “현 시대에 유효한 리더십은 다자가 참여해 국제공동체의 공동 이해 실현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라며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 및 유대강화가 양국이 떠안은 책임을 감당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3자를 축으로 하는 ‘3자간 협력’에 방점을 찍었음. 그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의 서한 교환 등 친선 강화를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양국간 최우선적인 협력 의제로 군축 협상을 꼽았음. 또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해결책 모색의 필요성과 국제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도 주요 이슈라고 지적함.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G20 회의 하루 전인 내달 1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섬.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